

성과요약서

강남구, '지방소득세·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' 전국 첫 시행



추진 개요

☑ 배경 및 목적

- ▶ 개별 세목 위주의 징수 관행을 벗어나, 유관 기관 빅데이터를 연계한 교차 검증 필요
- ▶ 단순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누락 세원을 찾아내되, 과세 예고 전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
- ▶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바로잡아주는 신고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

☑ 추진 전략

- ▶ 데이터 연계: 건강보험공단(급여 자료), 국세청(소득 자료) 등 공공 빅데이터와 지방세(주민세, 지방소득세) 자료 매칭
- ▶ 교차 검증: 주민세(종업원분)와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간의 과세표준 차이 분석을 통한 안분 신고 오류 추출
- ▶ 선제적 안내: 과세 예고 통지 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



추진 성과

☑ 세목 연계형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

- ▶ 주민세(종업원분): 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와 대사. 535건, 5억 9천만 원 발굴
- ▶ 법인지방소득세: 사업장 연면적 및 종업원 수 안분 착오 등 31건, 17억 8천만 원 발굴

☑ 납세자 친화적 신고 지원 서비스 구현

- ▶ 무조건적인 추징이 아닌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 제공
- ▶ 가산세 감면 혜택 안내 및 신고 절차 지원으로 납세 협력 비용 절감 및 민원 최소화



기대 효과

☑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 관리 체계 구축

☑ 지원 위주의 행정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자 권익 보호 동시 달성